

제3차 국가유산수리등에 관한 기본계획(2024~2028)

2024.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



목 차



I. 수립배경	1
II. 제2차 기본계획 평가	2
III. 정책 환경 및 여건 분석	7
IV. 비전 및 전략	11
V. 추진방안	13
1. 국가유산의 가치유지와 회복	
① 재료수급 및 기법전승 활성화	13
② 국가유산수리 역량 강화	15
③ 국가유산수리 제도 정립	17
2. 국가유산수리의 진흥	
① 재료수급 및 기법전승 활성화	19
② 국가유산수리 역량 강화	20
③ 국가유산수리 제도 정립	22
3. 수리현장의 공감과 신뢰 향상	
① 재료수급 및 기법전승 활성화	23
② 국가유산수리 역량 강화	25
③ 국가유산수리 제도 정립	27
<붙임> 추진일정 및 소요예산	28

I. 수립배경

□ 국가유산수리 정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중장기 로드맵 마련

- 국가유산수리의 품질 향상과 국가유산수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국가유산 수리정책의 향후 추진방향과 구체적 실천계획을 제시하는 5년 단위의 국가유산 수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 지난 기본계획 만료에 따른 차기 기본계획('24~'28) 수립 필요

- 「2차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5개년 기본계획(2019~2023)」이 2023년 만료됨에 따라 기존 기본계획의 추진실적 평가를 바탕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기본계획 수립 필요

□ 계획의 성격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근거한 법정계획
- 국가유산수리 정책의 비전과 방향을 중장기에 걸쳐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종합계획
-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세부 시행계획」 수립의 기준 및 방향을 제시하는 기본계획

□ 계획의 범위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및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유산 기본계획, 자연유산 기본계획과 연계하고, 다음 내용을 포함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기본방향
 - 국가유산수리 등의 품질확보 대책
 - 국가유산수리 등의 기술진흥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국가유산수리 등에 필요한 사항

II. 제2차 기본계획 평가

I 제2차 기본계획 주요 내용 I

□ ‘국민에게 신뢰 받는 국가유산수리’ 를 비전으로 가치보존, 가치제고, 정보공유, 기반강화를 4대 정책목표로 선정

- 국가유산의 원형유지를 위한 가치 보존
- 국가유산수리의 전문성 확보를 통한 가치 제고
- 국가유산수리의 정보공유를 통한 소통과 협력
- 국가유산수리 기반 강화를 위한 합리적인 제도 운영

□ 4개 대과제-8개 중점과제-16개 세부과제 수립

정책 과제	가치 보존	중점과제1 국가유산수리 가치 계승 ① 전통재료 수급 기반 마련 및 사용 활성화 ② 전통기법 체계적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중점과제2 원형보존의 기반 구축 및 단계별 절차 강화 ① 데이터 기반 국가유산수리 고증자료 확보 ② 책임성 강화를 위한 수리 단계별 점검 체계 마련
	가치 제고	중점과제3 전문인력 및 조직 육성 ① 우수인력 양성 및 전문성 제고 ② 국가유산수리 전문기관 육성 중점과제4 국가유산 수리기술 고도화 ① 수리 기법 조사 및 기초연구 활성화 ② 연구개발(R&D) 강화로 현대기술의 보완적 활용
	정보 공유	중점과제5 국가유산수리 정보의 체계적 관리·활용 ①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공개 ② 국가유산수리 기록의 통합 관리 중점과제6 국가유산수리 과정과 결과의 공유를 통한 가치부여 ① 수리현장 공개 등 국가유산활용 강화 ② 국가유산수리 정책 모니터링 및 소통 강화
	기반 강화	중점과제7 국가유산수리 기준 및 제도의 내실화 ① 국가유산수리 기준의 합리적 운영 ② 국가유산수리 기준 체계 고도화 중점과제8 국가유산수리 산업 육성 ① 국가유산수리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 등 지속 개선 ② 국가유산수리업 발전을 위한 기반 강화

Ⅰ 제2차 기본계획의 평가 Ⅰ

□ 제2차 기본계획의 비전인 ‘신뢰받는 국가유산 수리’에 따라 각종 정책 개발, 제도개선으로 수리체계 고도화 기반 마련

- 그러나 수리종사자 간 다양한 이해관계 상충, 코로나 19로 인한 지속적인 정책추진 어려움 등으로 일부과제는 추진 미흡

□ 분야별 성과와 한계를 평가하면,

○ 전통재료 및 전통기법

- 전통재료 인증제 신설(‘19년12월), 전통단청·석회·한지 품질기준 연구(지속), 전통재료 실태조사(‘22년1월~),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건립추진(‘22년4월, 착공), 문화유산 수리용 전통재료 수급계획 수립(‘23년7월) 등을 통해 전통재료 수급기반 마련
- 전통단청시범사업(지속),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전문교육 및 기능경진대회(‘20년~) 실시, 인력가공 단계적 확대(표준품셈 반영) 등 전통기법 보존 장려

(한계) 낮은 경제성·편의성으로 기피되는 인력가공 및 전통연장이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유도과 전통재료의 자생적 생산환경 구축 필요

○ 원형보존 기반구축

- 전통건축 해체수리현장 주요교체 부재 조사 및 수집(지속), 해체부재 처리 절차 및 기준 마련(‘22년1월) 등 전통건축부재 체계적 관리체계 마련
- 국가유산수리 이력시스템 구축 및 데이터 축적(‘21년~)으로 데이터 기반 고증자료 확보

- 설계심사제도(설계승인·이력확인·현황보고 의무화) 법제화('20년6월), 제1대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구성·운영('21년7월~), 설계심사관 지정 및 연수과정 개설('22년3월~) 등 국가유산수리 전문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점검체계 마련

(한계) 국가유산수리 환류체계 마련을 위한 사후평가 제도추진 미흡

○ 전문인력 및 조직

- 기술자·기능자 경력관리 기준 마련 및 시스템 구축('19년1월), 국가유산수리기능자 전문교육 실시('20년7월), 국가유산수리기술자·기능자 자격시험 출제방식 개선('20년8월), 전문교육 방법 다양화('21년11월) 등 국가유산수리종사자 실무능력과 전문성 제고
- 국가유산수리 전문기관인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의 업무 확장 및 고도화(부재 조사·연구·수집·보존·전시·활용/전통재료 수급관리·산업화 지원 등)

(한계) 기능자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단일등급의 자격체제로 능력향상에 대한 동기부여 부족

○ 기술연구

- 전통건축기술(니장) 연구 집대성('19년~'23년), 석조국가유산(석탑) 수리기술 연구 보고서 발간('19년), 목조건축 국가유산 수리이력 자료집 발간('20년~'21년)을 통해 전통기술 보존 및 복원 기반 축적
- 국가유산수리 HBIM 적용지침 마련 및 DB구축('21년~), 고대건축물 디지털복원('21년~'23년) 등 4차 산업기술을 활용한 국가유산수리 방안 제시
- 문화유산 보존원칙 수립('22년), 보존처리기술 개발·보급(지속), 중요 석탑 수리복원 및 기술지원('18년~)을 통해 국가유산수리의 이론적·기술적 방법론 제시

- 전통 단청안료 제조기술 연구 및 관련 특허출원('19년3월), 기술이전('20년9월) 으로 전통재료 기술개발 및 실용화 추진

(한계) 전통재료·기술 연구분야가 한정되어 있으며, 수리기술 관련 연구개발 성과의 현장 실증 활성화 필요

○ 정보관리

-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19년2월~) 으로 실적·경력관리, 보고서 등록업무 등 수리행정 일부 전산화 완료
- 시스템 고도화 ISP 용역('21년) 및 차세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사업 추진('22년~)을 통하여 국가유산 수리행정 전반의 전산화와 종합정보포털로서의 고도화 추진
- 국가유산수리정보 DB 및 수리이력 통합BIM 모델링('21년~)으로 국가유산 생애정보의 체계적 통합관리방안 마련

(한계) 수리종합정보시스템 운영 초기 단계로 낮은 인지도와 유인책 부족으로 활성화 미흡

○ 공유 및 소통

- 한일건축국가유산 교류 협의회 개최('19년11월), 건축유산 수리 관련 국제워크숍 개최('22년8월), 연구기관·수리종사자·학회 간 정책협의회 구성·운영('19년3월~, 10회) 등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가유산수리 정책지원 기능 강화
- 수리현장점검('19년~'22년, 815개소), 수리현장 온라인 공개('20년~'22년, 12개소) 등을 통해 현장 소통 및 비대면 대국민 서비스 실시

(한계) 코로나19로 국제교류 및 현장공개 확대 운영 애로

○ 제도개선

- 국가유산수리 품질 향상을 위한 원가계산기준·실적/경력관리·책임감리 등 신규제도 운영('19년2월시행)

- 의무감리대상 확대 및 수리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강화('20년1월)를 통해 수리현장 관리 체계 강화
- 「동산국가유산 보존처리 규정」 제정('21년11월),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년3월) 및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23년9월) 제정을 통해 유형에 따른 국가유산 관리 체계 기반 구축

(한계) 현행 수리관계 법령과 세부기준이 건조물 문화유산 중심으로 마련되어, 국가유산별 특성에 맞는 수리 세부기준 마련 필요

○ 산업육성

- 기능중심 전문수리업의 기술자 보유 요건 삭제 및 업종 신설('20년 5월), 실측설계업·감리업 겸업시 사무실 구비요건 완화('21년11월) 등 업종 등록요건 완화를 통해 시장 부담 경감과 전문수리업 활성화 여건 조성
- 국가유산수리능력 평가·공시제도 및 수리업 실적관리 도입('19년2월)을 통해 기술력 중심의 수리업 육성 도모
- 「표준품셈 정비 관리계획」 수립('20년1월)에 따른 표준품셈 모니터링 및 개정('22년~'23년), 임금직접지급제 시범사업 실시('20년), 국가유산수리협회 공제사업 개시('23년3월) 등 수리종사자 업무여건 개선 추진

(한계) 국가유산수리능력 평가·공시제도가 도입은 되었으나 활용이 저조한 실정이며, 업역간의 갈등 및 다양한 이해관계로 인하여 수리업역 확장 및 도급체계 개선 난항

III. 정책 환경 및 여건 분석

Ⅰ 정책환경 변화 분석 Ⅰ

□ 국가유산수리를 둘러싼 정책환경 변화를 유형별로 분류(STEEP)하여, 국가유산수리 정책에 영향을 미칠 요인을 분석

□ 사회(Society)

○ 인구구조 변화

- 저출산·고령화 심화로 생산연령 인구는 감소하는 반면, 고령 인구 비중은 증가세
- 국가유산수리종사자, 특히 기능자의 경우 청년층의 유입이 줄어들어 고령화 문제가 심각하며 전통기술 전승 단절 위기

○ 안전의식 대두

- 건설현장 안전문제에 대한 사회 전반적 관심 증가와 함께 '22년 「중대재해법」 시행
- 건설현장과 유사한 국가유산수리현장의 안전관리 강화 요구

○ 한국문화의 위상 강화

- 전세계적으로 한국문화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국가유산 및 전통 문화에 대한 관심과 향유 욕구 증대
- 국가유산의 보존이라는 수단적 가치 뿐 아니라 전통기술·전통재료 등 국가유산수리 본연의 유·무형적 가치 확산 기회

□ 기술(Technology)

○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 성장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의 발전으로 초지능화, 초연결성, 가상화 시대 도래

- 4차 산업혁명 기술 활용을 통해 국가유산수리행정의 비대면·디지털화 전환 및 국가유산수리 원천정보 확보 용이

○ 디지털유산 기반 기술 고도화

- 디지털유산 기술 발전으로 디지털포맷 전환을 통한 DB구축을 비롯해 3차원 계측, 모델링, VR·AR 시각화 등 다양한 기술의 활용 가능성 확보
- 해체가 어렵거나 훼손이 심한 국가유산의 경우 3D 스캐닝, 디지털 복원 등을 통해 원형고증을 강화하고 다양한 수리방법 제시 가능

□ 경제(Economy)

○ 경기 침체

- 세계적 인플레이션과 고금리 장기화로 국내생산자물가 상승 및 저성장 국면 진입
- 건축재정 및 수리원가 상승으로 보수정비 예산 부족에 따른 국가유산 수리품질 저하와 수리업등 경영난 심화 우려

○ 관광산업 활성화

- 엔데믹으로 보복여행 수요가 늘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관광산업은 회복세
- 청년층을 중심으로 체험 위주의 여행 선호도가 높아지고, 한류열풍이 지속됨에 따라 역사문화자원을 결합한 관광상품 수요 증가

□ 환경(Ecological)

○ 기후변화 가속화

- 전 지구적으로 급속한 기후변화에 따라 해수면 높이 및 연평균기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으며, 이상기후에 따른 산불, 폭우, 홍수 등 기후 재난 발생 증가

- 기후재난, 흰개미 등으로 인한 국가유산의 피해 사례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국가유산 손상방지 및 회복탄력성 확보를 위한 수리 기술의 연구개발과 수리재료 비축 필요성 대두

○ 탄소중립 추진

-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 및 범부처 차원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 추진에 따라 친환경·저탄소 중심의 생산·소비 구조 변화 강조
- 국가유산 온실가스 감축역량 강화를 위하여 친환경 국가유산 관리기반 구축 필요

□ 정치/법(Politics)

○ 규제개혁의 지속 추진

- 국민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제약하고 비효율을 초래하는 각종 규제의 개혁 및 합리화가 요구되고 있으며, 신설·강화규제에 대한 사전 통제 강화
- 규제조문이 많은 국가유산수리법령에 대한 개정 수요 증가

○ 국가유산 체제 전환

- '23년 「국가유산기본법」 제정으로 원형보존 중심의 '문화재' 체제에서 가치유지 및 확산 중심의 '국가유산' 체제로 전환
- 국가유산수리법령도 국가유산체제에 걸맞는 발전 방안 모색 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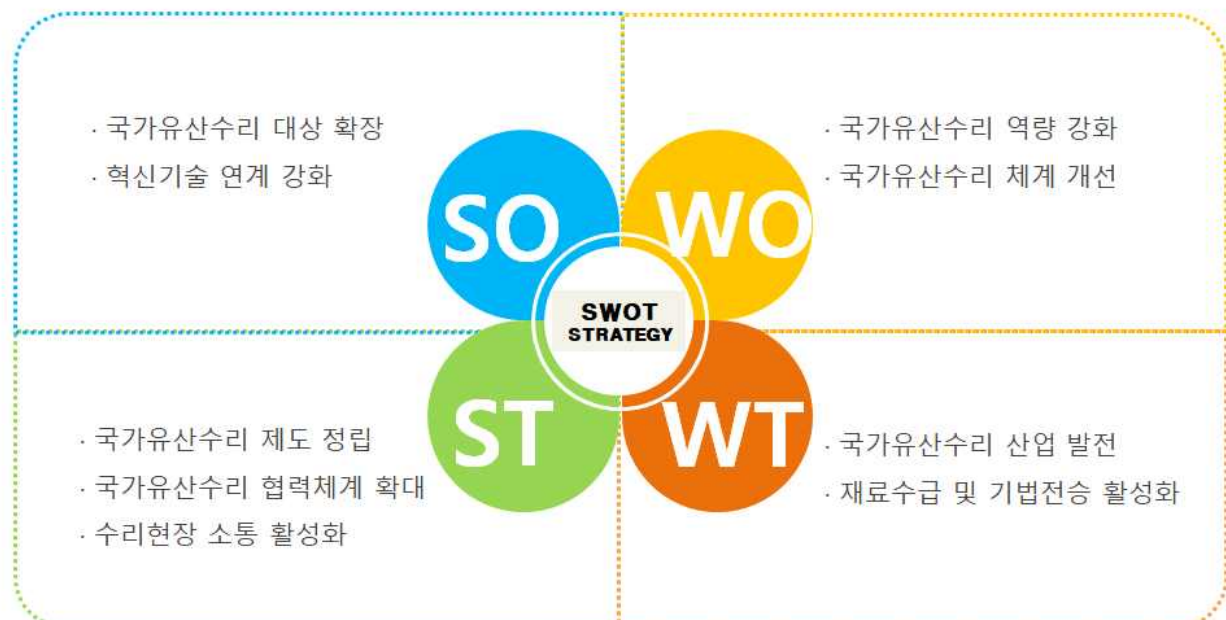
Ⅰ 정책여건 분석 및 추진전략 도출

- 지난 계획의 성과와 한계, 정책환경 변화를 토대로 국가유산수리 정책여건을 SWOT 분석하여 추진전략을 도출

SWOT 분석



전략 도출



IV. 비전 및 전략

Ⅰ 비전과 정책방향 Ⅰ

- “지속가능한 국가유산수리 정책 구현”을 비전으로, 진정성, 확장성, 혁신성의 정책방향에 따라 3대 정책목표 - 9개 전략과제 - 18개 세부과제 설정

Ⅰ 비전체계도 Ⅰ



Ⅰ 전략과제 추진체계 Ⅰ

정책목표	전략과제	세부과제	추진방안
국가유산의 가치유지와 회복	재료수급 및 기법전승 활성화	전통재료 수급기반 강화	전통재료 실태조사 및 비축·공급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
			수리재료 인증제 시행 및 품질기준 마련
			전통재료 사용 활성화 지원
		전통기법 전승지원 강화	국가유산수리 장인 육성 종합계획 수립
			전통기법 보급 활성화
	국가유산수리 역량 강화	전문교육 체계화 및 역량 제고	전통기법 DB 구축 활용
			자격증 취득 후 신규교육 확대
		국가유산수리 전문기관 효율적 운영	전문교육 과정 세분화
			설계심사관 심화 연수과정 운영
국가유산 수리의 진흥	국가유산수리 대상 확장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기반 마련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업무 고도화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운영기반 구축
		자연유산 수리 기준 고도화	국가유산수리 법 질서 확립
			국가유산수리 참여자 확대
	국가유산 수리산업 발전	국가유산수리 관련 법령 개정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적정 수리대가 및 수리기간 기준 마련
		국가유산수리기준 정비	국가유산수리 계약예규 정비
			국가유산수리 산업 통계자료 구축
	국가유산수리 협력체계 확대	국가유산수리 산업 활성화 지원	국가유산수리 업역 개편
			국가유산수리업 공제 제도 운영
		국가유산수리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국가유산수리종사자 실태조사 실시
		국내외 협력 체계 강화	국가유산수리종사자 경력관리의 체계화
			수리 현장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수리현장의 공감과 신뢰 향상	국가유산수리 체계 개선	수리기술 지원 활성화	부처간, 학제간 협력 체계 구축
			해외 수리사례 연구 교류
		국가유산수리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지자체 국가유산수리사업 기술지원
			ODA를 통한 해외 수리기술 지원
	혁신기술 연계 강화	국가유산수리 조사연구체계 강화	기후변화 대응 문화유산 보호 방안 마련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디지털 기술을 통한 수리 고도화	건축문화유산 조사방법론 구축
			참여설계제도 도입
	수리현장 소통 활성화	국가유산수리 기술 개발 보급	차세대 국가유산종합정보시스템 운영
			빅데이터 기반 국가유산 디지털 복원 활성화
		수리 종사자 현장소통 강화	국가유산 복원·보존처리 기술 개발
			기후재난·재해 대응 수리 기술 개발
		국가유산수리 대국민 홍보 추진	국가유산수리 관련 특허 기술 실용화 추진
			현장 안전점검 및 의견수렴 활성화
			협회 간 정책협의회 운영
			국가유산수리 현장 안내판 시각화 개선

V. 추진방안

Ⅰ 정책목표 1 Ⅰ 국가유산수리의 가치유지와 회복

1-① 재료수급 및 기법전승 활성화

□ 전통재료 수급기반 강화

○ 전통재료 실태조사 및 비축·공급

- 생산량이 부족하고 적기 확보가 곤란한 전통재료를 조사하여 수급 계획 수립

* ('24년) 종이류·석회·철물 실태조사, 목재·석재 수급계획 수립

* ('25~28년) 전수조사 실시 및 조사결과에 따른 수급계획 수립

- 실태조사 결과 수급이 어려운 전통재료는 사전 확보·비축하여 수리 현장에 적기 공급

* (사업내용) 구매, 생산[위탁/직접], 공급[관급자재/민간판매]

○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

- 경제성이 떨어져 생산이 원활하지 않은 전통재료의 생산자에게 생산 기반시설 비용을 지원하여 지속적인 생산, 유통 및 품질향상 유도

* 지원분야 : 화문석, 왕골, 철물, 초본류, 전통한지, 단청용 아교

* 지원범위 : 직·간접 생산기반시설 설치 보조

(직접설비) 전통가마·단야로 등 전통생산방식 시설, 자동화·스마트 설비 등

(간접설비) 안전설비, 전기·수도·가스설비, 정화설비,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 수리재료 인증제 시행 및 품질기준 등 마련

- 전통재료가 수리 현장에서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품질, 제작 공정, 사용원료 등을 평가하는 인증제 실시

* (인증)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 (시험기관)KOLAS 공인기관

* 전통재료별 인증기준 마련 : ('24년) 아교 → ('25년)기와 및 전돌 → ('26년) 철물

- 인증대상 전통재료 확대 및 인증제 개선을 위해 품질기준, 제조기술

마련 및 인증기준 개선안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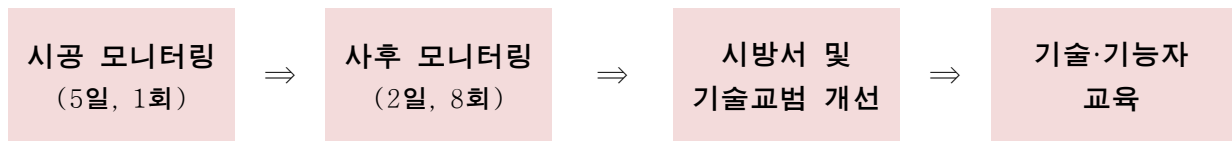
* (품질기준) 목재, 석재, 토사, 초본류 등

* (제조기술) 청석(돌기와), 너와, 이엉엮기·이기, 목재 자귀질 등

○ 전통재료 사용 활성화 지원

- 전통재료의 수리현장 적용성 검증을 위하여 전통재료 사용 시범사업
과 모니터링 시행 및 개선안 마련

* (지속) 전통단청 시범사업 모니터링 시행



- 전통재료 사용 활성화를 위하여 종사자 현장 전문교육 및 홍보 추진

□ 전통기법 전승지원 강화

○ 국가유산수리 장인 육성 종합계획 수립

- 수리기능자 고령화, 지역소멸 등 사회적 환경 변화에 대응해 국가
유산수리 장인 육성 중장기 종합계획 및 연차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 ('24년) 국가유산수리 장인 육성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 ('25년) 국가유산수리 장인 육성기관 건립 타당성 검토 연구 추진

○ 전통기법 보급 활성화

- 전통기법에 대한 조사 연구 결과를 반영한 기술백서(시방해설서) 제작
및 표준시방서 정비를 통해 전통기법 보급 확대

* ('24년) 기술백서 제작 로드맵 수립, 1차: 기초 및 기반 정비

* ('25~28년) 2~5차: 로드맵에 따른 단계적 정비 추진

○ 전통기법 DB 구축 활용

- 수리 분야별 원로·장인들의 구술기록·시공영상 등 전통기법 관련
DB를 차세대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통합관리 및 제공·활용

1-② 국가유산수리 역량 강화

□ 전문교육 체계화 및 역량 제고

○ 자격증 취득 후 신규교육 확대

- 수리기능자 기본소양 함양을 위하여 현재 수리기술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자격증 취득 후 신규교육 이수 대상을 수리기능자까지 확대

* 신규교육 내용 : 보존철학, 법령, 현장역할 등

○ 전문교육 과정 세분화

- 수리기능자 숙련도 제고를 위하여 전문교육 과정을 단계적으로 전 종목 확대 신설하고, 실습 위주의 교육 운영을 통해 수리기능자 역량 강화

* (기존) 전문교육 15종목 운영 → (확대) 전문교육 20종목 운영

○ 설계심사관 심화 연수과정 운영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국가유산수리 역량 강화를 위하여 「설계심사관 전문연수교육」 참여대상을 확대하고, 심화 연수과정 개설 및 운영

* (기존 연수대상) 문화재청, 광역 시·도 → (확대) 문화재청, 광역 시·도, 기초지

* (기존) 5일 → (확대) 20일(기본과정 5일, 심화과정 15일)

□ 국가유산수리 전문기관 효율적 운영

○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업무 고도화

- 전통건축수리기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수행

* 국보·보물 수리이력DB 및 이력관리 BIM 구축

* 수리보고서 등 데이터베이스 운영 및 공개

* 표준품셈 및 표준시방서 정비

- 전통건축 부재 보존·조사·연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전통건축 부재보존센터 제3 수장고 건립 추진

* ('24년) 설계용역 → ('25년) 착공 → ('26년) 준공 및 개관

<제3수장고 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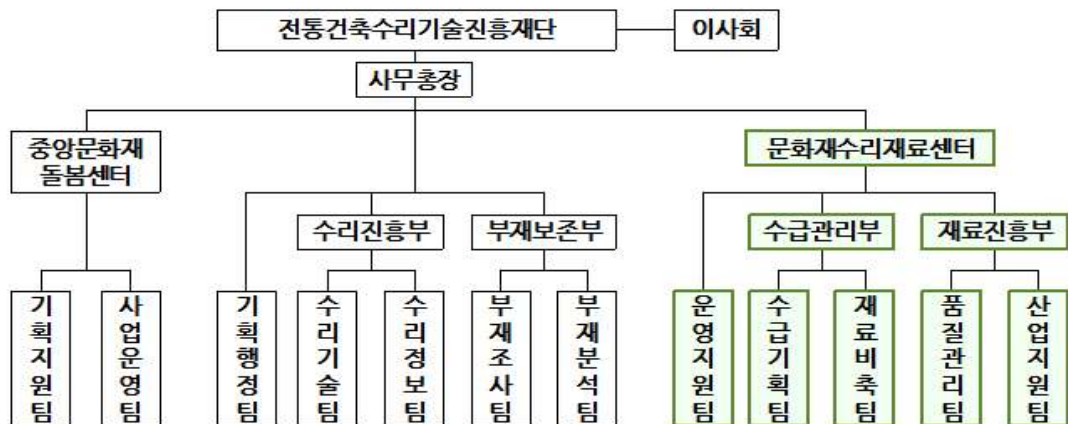
- 사업비 : 2.3억원(기본 및 실시설계비)
- 건립예정지 : 경기도 파주 전통건축부재보존센터 내 제3수장고 예정 부지
- 사업기간 : 2024 ~ 2026(3년)
- 총사업비 : 58억원

○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운영기반 구축

- 전통재료의 수급관리, 보급확대 및 산업화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인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의 운영 안정화 및 전통재료 관리 체계화 추진

* ('24년6월) 센터 준공 및 개관

* 사업 조직도



* 기구 및 인력 : 2부 5팀 31명

1-③ 국가유산수리 제도 정립

□ 국가유산수리 관련 법령 개정

○ 국가유산수리 법 질서 확립

- 부실업자 난립에 따른 시장질서 혼란 및 수리종사자 피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실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강화

* (기존) 기술능력 미달시 3차 영업정지 처분 → (개선) 4차 이상시 등록 취소

○ 국가유산수리 참여자 확대

- 다종다양한 국가유산수리 유형에 따라 설계, 수리, 감리 단계별 관계 전문가 참여 방안 마련
- 전통건조물 중심의 경미한 수리 세부 내용을 시대적 변화에 맞게 정비 추진

○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 국가유산수리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수리기술자 현장배치 세부기준' 과 '수리업자등 행정처분 예외사유' 정비 및 규제 합리화

* (기존) 수의계약, 5천만원 미만 사업 포함시 1인 최대 5개 현장 중복배치 허용
→ (개선) 1억원 미만 사업 포함시 1인 최대 5개 현장 중복배치 허용

* (기존) 자본금 일시적 미달일 경우 처분 면제 → (개선) 자본금 뿐 아니라 육아휴 직등에 따라 기술능력의 일시적 미달일 경우도 처분 면제

□ 국가유산수리기준 정비

○ 적정 수리대가 및 수리기간 기준 마련

- 현장 모니터링과 의견수렴을 통해 표준품셈 정비항목을 선정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표준품셈」 정비 및 품셈-시방서간 연계성 강화

* ('24년) 국가유산수리 표준품셈 5개년 정비계획 수립

- 참여설계제도의 도입과 연계하여 「국가유산수리 설계 대가기준」 개선 추진

* ('25~26년) 연구용역 추진

- 동산문화유산의 경우 특수성을 반영하여 별도 「**동산문화유산 표준품셈·시방서**」 신설

- * 동산분야 7개 재질 : 벽화(‘22년), 금속, 도토기, 석조, 소조, 목재, 서화

- 감리자의 과도한 업무부담 완화 및 적정 대가 지급을 위하여 **감리대가 기준 개선**

- * (‘25년) 국가유산수리 감리대가 기준(안) 마련 및 고시

- 국가유산수리 품질 향상 및 안전사고 발생 예방을 위하여 **적정 수리기간 산정 기준 마련**

- * (‘24년) 국가유산수리 적정 수리기간 산정 기준(안) 마련 및 고시

○ 국가유산수리 계약예규 정비

- 국가유산수리 계약 독과점 방지 및 수리업자 간 공생을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 추진**

- * (‘24년) 국가유산수리 계약예규 낙찰제 결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 * (‘25년) 「국가유산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 개정

I 정책목표 2 I 국가유산 수리의 진흥

2-① 국가유산수리 대상 확장

□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기반 마련

○ 근대건축유산 보수보강 방안 연구

- 선행 연구 자료가 부족한 근대 건축유산의 시공기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여 현장 적용 가능한 표준 수리기준안을 마련 운용 필요
- 당시의 건축재료, 구조, 시공법을 분석하여 훼손유형별 보수보강 방안 마련
- 근대건축유산 중 기초 연구가 시급한 조적조 건축분야를 우선 추진
 - * (1단계/'24년) 국·내외 근대건축유산 관련 기초자료 수집 및 DB구축과 기초연구 추진
 - * (2단계/'25-26년) 조적(돌·벽돌)조 분야의 재료,시공,구조 등 근대건축유산 사례와 특성 연구·분석
 - * (3단계/'27-28년) 선행 연구 기반으로 현장적용 가능한 보수·보강 방안 연구 및 제시

○ 등록문화유산 수리 영역 확보

- 등록문화유산의 가치 보존을 위하여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록문화유산의 수리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수리업자가 수리하도록 국가유산수리법상 근거 마련
- 등록문화유산 수리에 필요한 재료 및 기술 확보 방안 연구 추진

□ 자연유산 수리 기준 고도화

○ 전통조경 복원·정비 기준 마련

- 전통조경유산의 수리품질 향상을 위하여 유형별·대상별 복원정비기준 및 표준품셈 마련
 - * ('24년) 대표유형 분류, 기법 및 구성요소 도출, 문헌 고증 및 '전통지식' 분석, 표준시방서 개선
 - * ('24~26년) 현장실연·실사 기반 전통조경 표준품셈 마련·고시

○ 식물보호분야 수리기준 개선

- 자연유산 특성에 맞는 식물보호분야 품셈 및 관련 규정 정비

2-2 국가유산수리 산업 발전

□ 국가유산수리 산업 활성화 지원

○ 국가유산수리 산업 통계자료 구축

- 국가유산산업조사(국가승인통계) 및 수리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정책수립·평가를 위한 국가유산수리 산업 기초자료 수집 및 통계 구축

* (통계구축 대상) 연간 국가유산수리 발주 및 계약 현황, 수리종사자 연령 및 근로 현황, 업종별 사업자 및 매출 현황 등

○ 국가유산수리 업역 개편

- 건조물 문화유산 중심의 현 수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국가유산 수리업종 신설 및 업무범위 조정** 등 수리업역 개편

* (기존 종합업종) 보수단청업 1종 → (개선안) 보수단청업, 보수조경업, 보수보존과학업 등

○ 국가유산수리업 공제 제도 운영

- 국가유산수리산업 활성화와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보증·융자·손해공제 사업 시행** 및 안착 도모

* 공제사업을 위해 국가유산수리협회 내 공제조합 사업부서 운영('23년3월~)

○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 국가유산수리 업무 수행에 대한 국가유산수리업자등의 책임 강화와 발주자의 손해방지를 위하여 **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및 발주자의 수리 대가 계상 의무화**

□ 국가유산수리 종사자 근무여건 개선

○ 국가유산수리종사자 실태조사 실시

- 유능한 기술인력의 이탈을 방지하고, 현실적인 처우 개선방안 도출을 위하여 국가유산수리기술자 및 기능자의 **인력현황, 역량, 업무환경, 임금, 만족도** 등 실태조사 주기적 수행

- 국가유산수리종사자 경력관리의 체계화
 - 기술자·기능자 경력 관리 유인 강화와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차세대 수리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현장 기술인력관리 및 경력신고 연계 체계 구축
 - 체계적 경력관리를 토대로 전문성·숙련도에 따른 등급 기준 및 현장 특성에 따른 기술자 배치 기준 마련
- 수리 현장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 일용직 형태 수리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하여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시행
 - * ('20년) 운현궁 아재당 복원사업 임금직접지급제 한시 시행
 - * ('25년)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계획 수립
 - * ('26~27년) 국고보조사업 대상 임금직접지급제 확대 시행

2-3 국가유산수리 협력체계 확대

□ 국내외 협력 체계 강화

○ 부처간, 학제간 협력 체계 구축

- 국가유산 범위 확장 및 기후변화 등 정책환경 변화에 따른 선제적 대응을 위해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림청 등 부처간 국가유산수리 협력 체계 구축 추진
- 국가유산수리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분야(건축, 조경, 보존과학, 고고, 민속, 미술, 공학)의 다학제적 접근 및 협업 기반 조성

* 국가유산수리 주요 현안에 대한 심포지엄 개최 정례화 등

○ 해외 수리사례 연구 교류

- 수리정책 방향 설정 및 국제 경향 분석을 위하여 해외 사례 조사 및 교류 체계화

□ 수리기술 지원 활성화

○ 지자체 국가유산수리사업 기술지원

-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유산수리의 전문성 보완을 위하여 「국가유산수리 기술지도」 대상 확대

* 수리 대상 국가유산의 고증·양식, 수리기법 및 범위 등

- 국립국가유산연구원의 수리기술 개발 성과의 현장적용 및 기술지원을 통해 우수 수리기술 저변확대 도모

* 석탑 보수 기술지원 등

○ ODA를 통한 해외 수리기술 지원

- 국가유산수리기술의 해외 전파 및 국격 제고를 위하여 ODA 수원국 확대 및 교육연수 지원

* ('23년) 라오스·이집트 → ('24년) 캄보디아 추가

Ⅰ 정책목표 3Ⅰ 수리현장의 공감과 신뢰 향상

3-① 국가유산수리 체계 개선

□ 국가유산수리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 기후변화 대응 문화유산 보호 방안 마련

- 기후재난에 따른 문화유산 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취약 지역 문화유산 실태조사 및 보호방안 연구 추진
- 훼손이 심하며, 해체 보수 등 수리 규모가 큰 중요 문화유산에 대해 문화재청 직접 수리 추진

* ('24년) 취약 문화유산 실태조사(1차) 및 보호방안 연구

* ('25년) 취약 문화유산 실태조사(2차) 및 시범사업

* ('26~28년) 취약 문화유산 보호사업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국가유산 지정체계 및 안전분배를 고려하여 분과위원회 소관 사항 정비
- 분과별 성격에 적합한 위원 위촉 및 전문위원 활성화를 통해 수리 기술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 제2대 위원회 위촉 기간 : '24년7월~'27년7월

□ 국가유산수리 조사연구체계 강화

○ 건축문화유산 조사방법론 구축

- 건축문화유산(목조)의 조사기법 제고와 통일된 현장 적용성 기반 마련을 위해 정밀실측·해체수리 조사방법에 대한 세부기준 마련 연구
- 기존 정밀실측보고서·해체수리보고서에 대한 분석 및 조사기법 연구를 통해 효율적면서 완성도 높은 현장 조사방법 체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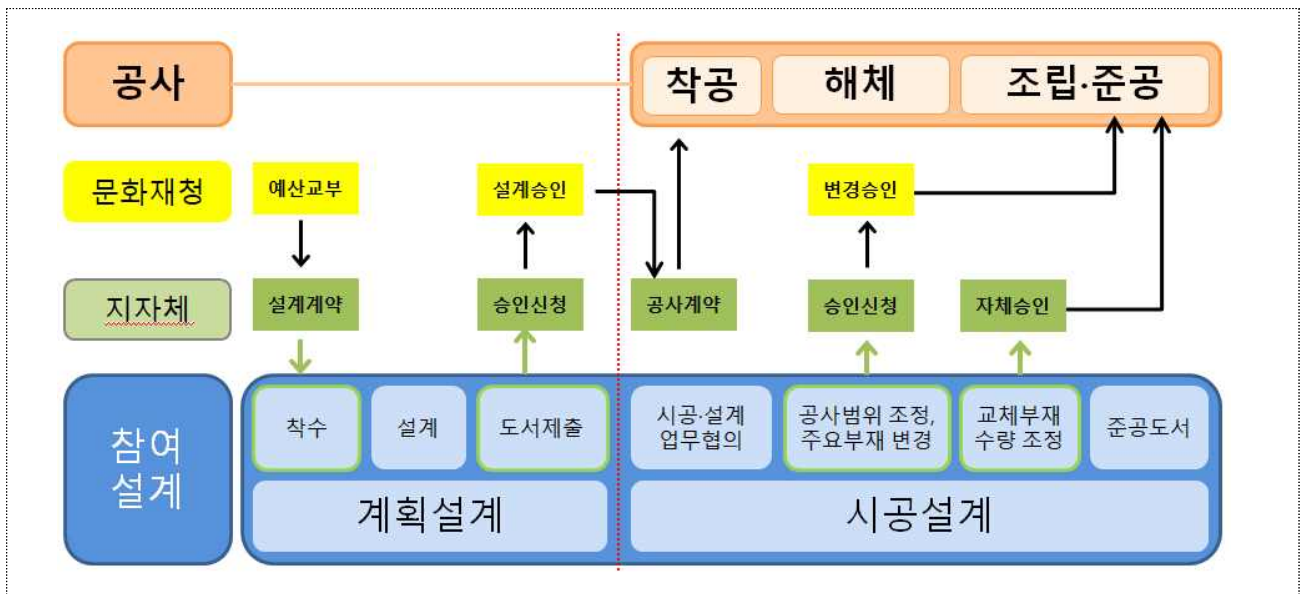
* (1단계, '24년) 건축문화유산(목조) 조사방법 연구인프라 구축

- * (2단계, '25~26년) 건축문화유산(목조) 정밀실측분야 조사방법 연구
- * (3단계, '27~28년) 건축문화유산(목조) 해체수리분야 조사방법 연구



○ 참여설계제도 도입

- 실측설계와 수리현장의 유기적 연결을 위해 실측설계업자가 설계부터 수리완료까지 참여하는 '참여설계제' 도입



- * ('24년) 참여설계제도 도입 기본계획 수립 및 시범사업 대상선정
- * ('25~26년) 참여설계제도 시범사업 시행(문화유산 해체보수 10여건)
- * ('27년) 법령 정비 및 제도도입 확정

3-2 혁신기술 연계 강화

□ 디지털 기술을 통한 수리 고도화

○ 차세대 국가유산종합정보시스템 운영

- 수리 관련 시스템을 일원화하여 자료를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고 정보제공·서류 제출 및 발급 등 비대면온라인 서비스 확대 시행

* ('24년) 차세대 국가유산수리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완료 및 운영지침 제정

○ 빅데이터 기반 국가유산 디지털 복원 활성화

- 국가유산수리 결과 예측 및 과학적 의사결정을 위하여 빅데이터* 기반 디지털트윈**기술을 활용한 국가유산 지능형 관리 및 디지털 복원 사업 추진

* 국가유산 진단·분석데이터, 공간정보(GIS), 수리이력, HBIM 등

** 디지털트윈 : 가상공간에 실물과 똑같은 물체를 만들어 다양한 모의시험을 통해 검증하는 기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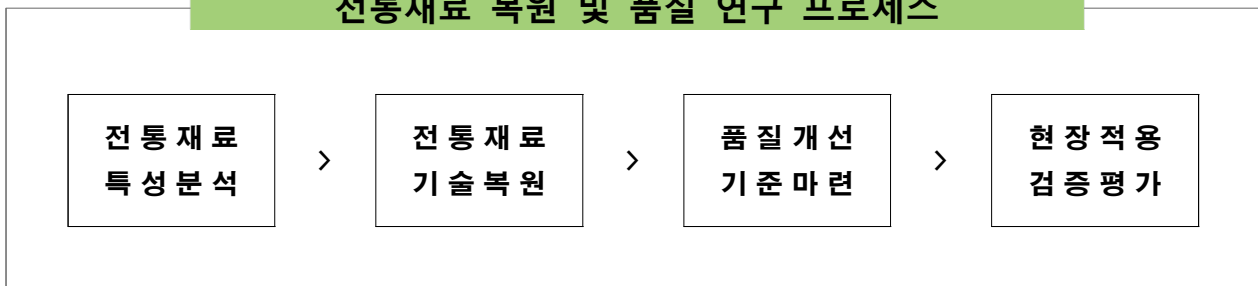
□ 국가유산수리 기술 개발 보급

○ 국가유산 복원·보존처리 기술 개발

- 복원용 전통재료(안료, 한지, 석회)의 연구개발을 통해 국가유산수리 품질개선 기준 제시

안 료	한 지	석 회
•전통 단청안료 특성 및 품질 연구 •전통 단청안료 천연원료 개발 및 활용	•궁궐 보수용 한지 복원기술 연구 •한지 관련 한국산업표준(KS) 제안	•전통석회 특성 및 품질 연구 •전통석회 성능 개선 및 현장 적용

전통재료 복원 및 품질 연구 프로세스



- **동산문화유산 재질별 특성에 맞는 보존처리 기술 개발 및 보급 추진**

- * 유기질 문화유산 보존처리 기술(세척, 강화, 접합, 복원) 지원 및 디지털 정밀복원 (X-ray, CT, 3D scan 등)
- * 무기질 문화유산의 보존처리 기술(세척·부식화합물제거·탈염 등) 개발 및 현장 적용
- * 대형 문화유산(범종, 불상, 벽화, 석조물 등) 보존처리 조사 및 기술개발

- **수리현장 활용할 수 있는 현장맞춤형 수리 기술 개발**

- * 보수·복원용 특대재건조 기술 및 비파괴 함수율 측정 기술 개발
- * 수종별·수리공정별 사용 목재의 적정 함수율 기준 마련

○ **기후재난·재해 대응 수리 기술 개발**

- **환개미 번식 등 생물피해 방제 기술 고도화**

- * 방충방부제, 토양처리제, 훈증제 등 방제약제의 성능 분석 및 안전성 평가 기준 마련
- * 기존 방제약제의 현장 시공 개선 방향 제안

- **국가유산 손상 최소화를 위한 재난 제어 기술 개발 및 현장 도입**

- * 목조건축유산 화재 안전 처리기술 및 고목재 회복처리기술 개발

- **자연유산의 기후변화 적응 기술 연구개발**

- * 이상기후 대응 식물유산 생육 상태 모니터링 및 변화 예측 시스템 개발
- *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노거수 목질부 표면보호제 및 관리 프로세스 개발

○ **국가유산수리 관련 특허 기술 실용화 추진**

- 국가유산수리 기술, 재료, 보조기구 등 국내외 특허 출원 활성화 및 수리현장 적용 지원을 통해 실용화 추진

3-3 수리현장 소통 활성화

□ 수리종사자 현장소통 강화

○ 현장 안전점검 및 의견수렴 활성화

- 수리현장 안전점검 기능 강화 및 태풍·호우 시 수리현장 긴급 점검 추가 실시
- 지적 위주의 점검이 아닌 소유자, 지방자치단체, 수리종사자 등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현장점검 간담회 기능 제고

○ 협회 간 정책협의회 운영

- 주요 정책의제에 대한 의견조율 및 실현성 제고를 위하여 문화재청, 국가유산수리협회, 기술자협회, 기능인협회 간 정책협의회 운영 활성화

□ 국가유산수리 대국민 홍보 추진

○ 국가유산수리 현장 안내판 시각화 개선

- 국가유산수리 현장에 대한 국민 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국가유산 복원 후 모습을 예상할 수 있는 '국가유산 복원 안내판' 설치 지원사업 추진

○ 국가유산수리 홍보 콘텐츠 제작·보급

- 국가유산수리에 대한 이미지제고 및 관심 유도를 위하여 국가유산 수리현장 기행 칼럼, 웹툰 등 수리 관련 콘텐츠 제작·보급 추진

추진과제		소요예산 (’24~’28 /억원)	추진일정	협업부서 (기관)
총 예산		1,763.5	’24~’28	
1. 국가유산의 가치유지와 회복				
① 재료수급 및 기법전승 활성화				
① 전통재료 수급기반 강화	전통재료 실태조사 및 비축·공급	226.5	’24~’28	전통건축수리 기술진흥재단
	전통재료 생산기반시설 지원	40	’24~’28	
	수리재료 인증제 시행 및 품질기준 마련	15.5	’24~’28	
	전통재료 사용 활성화 지원	23	’24~’28	
② 전통기법 전승지원 강화	국가유산수리 장인 육성 종합계획 수립	2	’24~’25	전통건축수리 기술진흥재단
	전통기법 보급 활성화	5	’24~’28	
	전통기법 DB 구축 활용	비예산	’24~’28	
소 계		312	’24~’28	
② 국가유산수리 역량 강화				
① 전문교육 체계화 및 역량 제고	자격증 취득 후 신규교육 확대	4	’25~’28	전통문화교육원
	전문교육 과정 세분화	25	’24~’28	
	설계심사관 심화 연수과정 운영	5	’24~’28	
② 국가유산수리 전문기관 효율적 운영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업무 고도화	424	’24~’28	전통건축수리 기술진흥재단
	국가유산수리재료센터 운영기반 구축	318	’24~’28	
소 계		776	’24~’28	
③ 국가유산수리 제도 정립				
① 국가유산수리 관련 법령 개정	국가유산수리 법 질서 확립	비예산	’24	-
	국가유산수리 참여자 확대	비예산	’25~’26	
	불합리한 행정규제 개선	비예산	’24~’25	

② 국가유산수리기준 정비	적정 수리대가 및 수리기간 기준 마련	25	'24~'26	전통건축수리 기술진흥재단/ 유형문화재과
	국가유산수리 계약예규 정비	2	'24~'25	
소 계		27	'24~'28	
2. 국가유산 수리의 진흥				
① 국가유산수리 대상 확장				
① 근현대문화유산 보존 기반 마련	근현대건축유산 보수보강 방안 연구	11	'24~'28	근대문화재과/ 건축문화재연구실
	등록문화유산 수리 영역 확보	비 예산	'25~'26	
② 자연유산 수리 기준 고도화	전통조경 복원·정비 기준 마련	2	'24~'26	천연기념물과
	식물보호분야 수리기준 개선	2	'24~'25	
소 계		15	'24~'28	
② 국가유산 수리산업 발전				
① 국가유산수리 산업 활성화 지원	국가유산수리 산업 통계자료 구축	비 예산	'25~'28	정책총괄과 천연기념물과 수리협회
	국가유산수리 업역 개편	비 예산	'25~'26	
	국가유산수리업 공제 제도 운영	비 예산	'24~'28	
	손해배상보험(공제) 가입 의무화	비 예산	'24~'25	
② 국가유산수리 종사자 근무 여건 개선	국가유산수리종사자 실태조사 실시	2	'25~'28	수리협회
	국가유산수리종사자 경력관리의 체계화	18	'24~'28	
	수리 현장 임금직접지급제 시행	비 예산	'25~'27	
소 계		20	'24~'28	
③ 국가유산수리 협력체계 확대				
① 국내외 협력 체계 강화	부처간, 학제간 협력 체계 구축	비 예산	'24~'28	-
	해외 수리사례 연구 교류	2	'24~'28	
② 수리기술 지원 활성화	지자체 국가유산수리사업 기술지원	비 예산	'24~'28	건축문화재연구실 국제협력과
	ODA를 통한 해외 수리기술 지원	150	'24~'28	
소 계		152	'24~'28	

3. 수리현장의 공감과 신뢰 향상

① 국가유산수리 체계 개선

① 국가유산수리 선제적 대응 체계 마련	기후변화 대응 문화유산 보호 방안 마련	52.5	'24~'28	-
	국가유산수리기술위원회 심의기능 강화	비 예산	'24~'27	
② 국가유산수리 조사연구 체계 강화	건축문화유산 조사방법론 구축	10	'24~'28	건축문화유산연구실
	참여설계제도 도입	비 예산	'24~'27	
소 계		62.5	'24~'28	

② 혁신기술 연계 강화

① 디지털 기술을 통한 수리 고도화	차세대 국가유산종합정보시스템 운영	57	'24~'28	전통건축수리 기술진흥재단/ 건축문화유산연구실
	빅데이터 기반 국가유산 디지털 복원 활성화	20	'24~'28	
② 국가유산수리 기술 개발 보급	국가유산 복원·보존처리 기술 개발	80	'24~'28	정책총괄과/ 연구기획과/ 복원기술연구실/ 안전방재연구실/ 보존과학센터
	기후재난·재해 대응 수리 기술 개발	200	'24~'28	
	국가유산수리 관련 특허 기술 실용화 추진	10	'24~'28	
소 계		367	'24~'28	

③ 수리현장 소통 활성화

① 수리 종사자 현장소통 강화	현장 안전점검 및 의견수렴 활성화	비 예산	'24~'28	-
	협회 간 정책협의회 운영	비 예산	'24~'28	
② 국가유산수리 대국민 홍보 추진	국가유산수리 현장 안내판 시각화 개선	30	'26~'28	대변인실
	국가유산수리 홍보 콘텐츠 제작·보급	2	'25~'28	
소 계		32	'24~'28	